

탄핵정국·관세전쟁 뚫고 ‘사천피’ 약진… 상승률 69% 기록

〈4000+코스피〉

2025년 주식시장 결산

지난해 말 비상계엄 사태와 탄핵 정국, 미국발 관세전쟁이라는 복합 악재 속에서 출발한 2025년 한국 증시가 예상 밖의 성과를 보이며 연말을 향해 가고 있다. 정치 불확실성 해소와 외국인의 귀환, 주주친화 정책이 맞물리며 코스피는 사상 처음 4000선을 넘어서는 기록적인 한 해를 보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정국이 빠르게 안정되자 한국 주식시장의 매력도 재평가 되고 있다. 자본시장 선진화와 주주가치 제고를 내건 정책 드라이브가 한국 증시의 지형을 바꾸고 있는 것이다.

대선 등 국내외 불확실성 해소 AI 확산에 따른 반도체 업황 호조 주요국 증시 중 상승률 1위 기록

◆ 한국 증시 재평가… 기록적 한 해

1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코스피는 1.43% 상승한 4056.41에 마감하며 다시 4000선을 회복했다. 올해 들어서는 69.05% 뛰었다. 지난달 3일에는 4221.87까지 올라서며 75.95%까지 상승 폭을 확대시켰다.

1980년 1월 4일 100포인트에서 시작한 코스피는 1989년 1000선까지 9년, 2007년 2000선까지 18년, 이후 2021년 3000선까지 13년이 넘게 걸렸다. 1000포인트를 도달할 때마다 약 10여년의 세월을 견딘 것이다. 하지만 4000선은 단 5년 만에 돌파하면서 이례적인 속도를 보였다.

특히 올해는 지난 10월 이후 외국인이 대규모 차익 실현에 나서며 11월 한 달에만 14조원 이상의 매물을 쏟아냈음에도 다시 4000선을 회복했다. 시장 체력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이 지난 10월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코스피 4000p 돌파 기념행사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시스

이 이전과는 달라졌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올해 코스피 상승률은 주요국 증시 중 1위를 기록했다. 코스피 대비 부진한 상승률을 보였던 코스닥지수 역시 34.34% 상승하며 상위권에 이름을 올렸다.

이날 기준 다우존스30산업평균 지수(13.09%),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15.62%), 나스닥종합 지수(19.68%) 등 미국 증시뿐만 아니라 닛케이225 지수(24.11%), 중국 상해종합 지수(15.47%), 대만 가권 지수(19.49%) 등 주요 아시아 지수들과 비교해도 압도적이다.

한국 증시 강세의 배경으로는 인공지능(AI) 확산에 따른 반도체 업황 호조가 가장 먼저 거론된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중심으로 한 대형 반도체주의 주가 상승이 지수 전반을 끌어올렸다는 분석이다. 여기에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 사이클 재개 기대감, 외국인 투자자의

국내 증시 복귀 움직임이 상승 동력에 힘을 보탰다.

실제로 외국인 매수세가 본격화된 5월 말부터 코스피 상승세가 본격화됐다. 지난해 중반부터 올해 4월까지 유가증권시장에서 약 38조원을 순매도하며 한국 시장을 떠났지만, 6월 조기 대선을 전후로 태도를 바꿨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지난 5월부터 10월까지 코스피에서만 약 21조3129억원을 순매수했으며, 이중 약 64%(13조6802억원)는 삼성전자를 사들인 금액이다. 연초만 해도 방향성을 가늠하기 어려웠던 증시 환경과는 대조적인 흐름이다.

증권가에서는 두 차례 상법 개정을 포함한 새 정부의 기업지배구조 개선 기조가 외국인 투자심리를 자극한 결정적 요인으로 보고 있다. 이재명 정부의 자본시장 활성화 정책이 본격화되며 지난 6월 20일 코스피가 3000선을 회복했고, 이후 10월 27일 사상 첫 4000선에 진입

했다.

◆ ‘사천피’는 뉴노멀… 다음 목표는 ‘코스피 5000 시대’

이제 시장은 코스피 4000선을 일시적 고점이 아닌 ‘기준선’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증권가는 ‘코스피 5000 시대’가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 증시가 글로벌 주요국 대비 여전히 저평가돼 있고, 이익 모멘텀은 상위권에 있다는 점에서 밸류에이션 정상화만으로도 레벨업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가장 낙관적인 전망을 내놓은 곳은 현대차증권으로 3900~5500을 제시했으며, 대신증권과 부국증권, NH투자증권도 최대 5000포인트 이상을 예상했다. 이외 삼성증권은 4000~4900을, 다올투자증권은 3740~4930, 유안타증권 3800~4600, iM증권 3500~4500 등이다.

이경민 대신증권 FICC리서치부장은

“한국은 글로벌 주요국 증시 중 가장 저평가돼 있지만 이익모멘텀은 최상위권”이라며 “글로벌 주요국들과 밸류에이션 키 맞추기만으로도 최소 10%에서 30% 상승여력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현재 코스피의 자기자본이익률(ROE) 수준은 11.2%인 반면, 주가수익비율(PER)은 1.3배 수준에 그친다. 하지만 ROE가 9.5%에 불과한 일본의 PER도 1.5배에 위치한다는 부연이다. 이어 이 부장은 “이재명 대통령의 ‘코스피 5000 시대’가 가시권에 들어오고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단기간 급등에 따른 피로감은 경제 요인으로 꼽힌다. 이날 원·달러 환율도 1480원을 넘어서며 외환위기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 중이고, AI 거품론이 재점화되고 있는 점도 부담으로 작용한다.

증권가, 내년 긍정적 전망 쏟아져 고환율 지속·AI 버블 논란 등 변수 “오천피 시대” 충분히 가능할 것

최지욱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현재 원·달러 환율은 기업 및 투자자 중심의 달러화 수요 지속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11월 중순 일시조정 이후 저점을 계속 높이고 있다”며 “연말·연초에도 1450원 아래로 내려오지 못할 경우 한국은행은 높은 수준의 환율이 물가안정 및 금융안정에 미치는 영향을 재검토해 향후 통화정책 및 경제전망에 반영할 것”으로 예상했다. 단기적으로는 단기적으로는 연말까지 1450원 아래 마감 여부가 심리 전환 여부에 중요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신하은 기자 godhe@metroseoul.co.kr

금감원, 부실징후기업 221개사 분류

고금리 장기화에 신용 리스크 이어져 대기업 17개사, 중소기업 204개사

금융당국이 올해 정기 신용위험평가 결과 부실징후기업으로 221개사를 선정했다. 전년대보다 소폭 줄었지만, 대기업 부실징후기업은 오히려 늘어 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기업 신용 리스크가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는 평가다.

금융감독원은 “2025년 정기 신용위험평가 결과 및 향후 계획”을 통해 채권은 행이총 221개사를 부실징후기업(C·D등급)으로 분류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보다 9개사 감소한 규모다. 등급별로는 C등급이 104개사, D등급이 117개사로 집계됐다.

기업 규모별로 보면 대기업 부실징후기업은 17개사로 전년 대비 6개 늘어난 반면, 중소기업은 204개사로 15개 줄었다. 금융권 신용공여 500억원 이상 기업을 대기업으로 분류한다.

다만 중소기업의 경우 분기별로 실시하는 수시평가까지 포함하면 부실징후기업은 오히려 증가했다. 정기·수시평가를 합산한 올해 부실징후기업은 총 437개사로, 전년(391개사)보다 46개 늘었



금융감독원.

/손진영 기자 son@

다. 이는 고금리 기조가 장기화되면서 일부 한계기업을 중심으로 재무구조가 악화된 영향으로 분석됐다.

업종별로는 부동산업이 38개사로 가장 많았다. 이어 자동차(16개), 도매·중개(15개), 기계·장비(12개), 고무·플라스틱(11개), 전자부품(10개) 순으로 나타났다. 전년 대비 부동산업과 전자부품업종의 부실징후기업은 각각 8개, 5개 증가한 반면 고무·플라스틱, 기계·장비, 자동차 업종은 감소했다.

부실징후기업이 은행권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인 것으로 평가됐다. 부실징후기업에 대한 은행권 신용공여 규모는 2.2조원으로 전체 은행권 신용공여의 0.1% 수준에 그쳤다. 이에 따

른 대손충당금 추가 적립액은 약 1869억원으로 추정되며, 국내은행 BIS 총자본비율은 0.01%포인트 하락하는 데 그칠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부실징후기업에 대한 후속조치를 신속히 진행할 방침이다. 채권단 중심의 워크아웃이나 회생절차를 통해 경영 정상화를 유도하고, 구조조정을 지원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채권은행의 사후관리를 강화하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아울러 부실징후기업은 아니지만 일시적 유동성 애로를 겪는 기업에 대해서는 신속금융지원 프로그램과 프리워크아웃 제도를 통해 금융 지원을 확대한다. 은행권은 경영위기 중소기업이 산업부·중기부 등 유관기관의 사업재편, 자율구조개선, 재기지원 컨설팅을 받을 수 있도록 연계 지원도 강화할 예정이다.

금감원 측은 “정기 신용위험평가는 부실징후기업을 초기에 선별해 선제적 구조조정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라며 “기업 부실이 금융시스템 전반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허정윤 기자 zelkova@

금융위, 하나·신한투자증권 ‘종투사’ 지정

단기금융업 인가 심의·의결

하나증권과 신한투자증권이 발행어음 업무가 가능한 종합금융투자사업자로 최종 지정됐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제22차 정례회의를 열고 하나증권과 신한투자증권에 대해 자기자본 4조원 이상의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지정과 단기금융업 인가를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지정으로 단기금융업무를 영위

할 수 있는 종합금융투자사업자는 총 7개사로 늘었다. 금융위는 추가 지정된 종투사들이 모험자본 공급을 비롯해 기업의 다양한 자금 수요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금융위 측은 “종투사 제도는 기업금융과 모험자본 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라며 “향후에도 자본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역할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허정윤 기자

금융당국, 종합투자계좌 상품 관리 강화

금융당국이 IMA(종합투자계좌) 출시를 앞두고 상품 설명서와 약관, 광고 기준 등 판매 전반에 대한 투자자 보호장치를 대폭 강화했다. 초대형 증권사의 신규 핵심 상품인 만큼, 출시 초기부터 불안전판매를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금융감독원은 자본시장감독국과 금융투자협회, 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투사)가 참여한 태스크포스(T/F)를 통해 IMA 상품 판매 서류의 내용과 형식을 전

면 정비했다고 17일 밝혔다.

금감원은 우선 상품설명서에 IMA의 핵심 투자위험을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했다. 약관을 통해서는 종투사의 관리·감시 책임을 명확히 했다. 운용 정보의 투명성도 강화된다. IMA 자산운용보고서는 중도해지 가능 여부와 관계없이 분기별 1회 투자자에게 교부되며, 공모펀드 수준으로 주요 투자종목 명세와 수익률 현황 등이 제공된다.

/허정윤 기자